

IBK기업은행 후임 은행장 ‘촉각’… 외부 출신 인사 ‘무게’

윤종원 행장 임기 만료 앞뒤
정은보·이찬우·도규상 등 거론
정부와 손발 맞출 인사 가능성
‘관료 출신 반대’ 노조 반발 관건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IBK기업은행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의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후임 은행장으로 외부 출신 인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임기가 내년 1월 2일 종료되면서 차기 은행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은행장 후보로는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 이찬우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도규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성태 기업은행 전무이사, 최현숙 IBK캐피탈 대표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내부출신보다는 외부

출신이 차기 기업은행장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국내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상황 속에 놓여있고 무역수지는 7개월째 적자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레고랜드발 자산유동화어음(ABC)이 촉발시킨 자금시장의 ‘돈맥경화’ 현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국 경제 곳곳에서 ‘적신회’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 관료 출신 인사를 국책은행장으로 지명해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 등에 따른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료 출신 인사를 배치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업은행은 정부가 최대주주인 국책은행으로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 정부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다.

문제는 기업은행 노조의 반발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후임 은행장을 둘러싼 낙하산 인사 선임에 대해 강력한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관료 출신 낙하산을 강행한다면 2020년 금융권 최장기 임명 반대 및 출근 저지 투쟁이 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출신으로 노조들의 강력한 시위로 인해 임명 27일 만에 첫 출근에 성공했다.

기업은행장 자리는 대부분 경제 관료 출신이 차지하다가 2010년 들어 조준희 행장에 이어 권선주 행장, 김도진 행장 등 10년간 3대 연속 내부 출신이 발탁됐다. 유 행장이 이 흐름을 끊었다.

노조 입장에서는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를 찾아 ‘낙하산 재발 방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외부인사를 반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 ‘낙하산 재발 방지’ 약속은 했지만 이번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약속이 지켜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정부 1년차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손발을 맞출 외부인사가 차기 행장이 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기업·은행권 외화부채 ‘산더미’… 동반 부실 우려 ↑

기업 빚, 사상 첫 200조 넘어서
은행권, 올 들어서만 15조 빌려
이자비용·원금 상환 부담 커져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56.6원)보다 4.8원 낮아진 1351.5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강달러’ 현상으로 기업부터 은행까지 달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외화 부채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은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들어서만 외화를 15조원 넘게 빌려왔다. 기업의 외화 빚은 사상처음 200조원을 넘어서면서 이자비용이 크게 늘었고, 상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올해 3분기 외화 차입금 평균 잔액은 지난해보다 47.9%(15조777억원) 늘어난 총 46조5286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기업

의 외화 자금 수요가 늘어나 은행이 해외 금융회사에서 외화를 빌려 대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입금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자

외부로부터 빌린 돈이다. 기업이 만기가 돌아오면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의 외화 차

입금 평균 잔액이 같은 기간 대비 69.8% 늘어나 18조3631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10조2581억원, 9조239억원으로 각각 50.7%와 24.5%씩 해당 금액이 증가했다. 신한은행도 35.0% 늘어난 8조883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전날보다 14.4원 급등(원화 가치 하락)한 1354.7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0일(1377.5원) 이후 11일 만에 다시 달러당 1350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은행의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원금 상환 부담은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들의 외화빚도 사상처음 200조원을 넘어서면서 불어난 이자비용과 재조달(차환)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 우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한국의 비금융기업(기업) 대외채무 합계는 1491억1070만달러(207조710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38억6860만달러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외채무란 기업이 갚아야 하는 외화 빚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 외화부채는 191억6520만달러, 1년을 초과하는 장기 외화부채는 1299억4550만달러에 달했다.

문제는 달러 가격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은행권이 원화 가치 하락을 우려해 빚내서 외화를 끌어들이는 상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대호 KB증권 연구원은 “극단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와 유사한 상황이다”라며 “최우선적으로 현금 확보에 매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어 금융시장의 돈줄이 얼마나 메달라가고 있는 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고금리에 만기도래까지… 캐피탈사 ‘이중고’

채권발행 의존도 높고
車 할부 판매량도 부진

채권시장 경색으로 캐피탈사의 수익성과 유동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입 부채 비중이 높은 데다 중고차 시장 한파로 캐피탈사의 주 수입원인 리스와 자동차 할부 판매량도 부진하기 때문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캐피탈사의 차입부채 비중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중은행(12%), 증권사(58%), 카드사(70%)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캐피탈사는 여전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같은 여전사인 카드사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며 채권발행 의존도도 높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경우 AA+등급의 여전채(3년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반면 캐피탈사의 경우 통상 A~A+등급의 여전채를 발행한다. 지난 21일 기

준 해당 등급의 여전채 금리 상단은 평균 6.71%다. 카드사보다 통상 0.9%포인트(p)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지난달 캐피탈채 금리 상단은 7%를 돌파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중대형 캐피탈사(56%)와 중소형 캐피탈사(27%)는 차입 부채 비중이 대형사(80%)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저금리 단기채권 비중이 높은 만큼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채권 만기가 돌아 오고 있다는 것. 조달 수단이 한정적인 캐피탈사는 통상 차환 발행을 통해 채권을 상환한다. 채권 시장 불안정이 이어질수록 부담해야 하는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만기 도래’와 ‘금리 상승’이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형 및 소형 캐피탈사를 중심

으로 유동성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시장이 얼어 붙은 것 또한 캐피탈사의 건전성 약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캐피탈사의 주력 상품인 리스와 자동차 할부 이용률이 함께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중고차 시세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수입차에 이어 국산차 시세 또한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할부 원금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영중고차 기업 ‘케이카’는 지난 달에 이어 11월에도 중고차 시세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서다.

한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시장이 어려워지고 조달 금리가 상승하면서 순수익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금융위, P2P기업 영업·금융환경 점검

P2P산업 발전 위한 간담회 열어

최근 금리상승 등 경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P2P기업들의 경영환경도 악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외부 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논의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P2P기업들의 영업환경과 금융환경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어려운 경제·금융환경일수록 중·저신용자와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 P2P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애로를 살펴보고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P2P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정을 자동화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곳이다. 지금까지 P2P기업에서 지원된 개인신용대출은 70% 이상이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대출금리는 평균

10~15% 수준이다.

이날 P2P기업들은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만큼 금융기관을 통한 투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저신용자와 중소기업의 대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출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외부 플랫폼을 통한 광고를 허용하고,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여 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를 통해 제공하던 광고를 중개행위로 보고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유권해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지속적으로 현장 간담회를 통해 P2P기업과 소통해 나가겠다”며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속에서도 투자자보호를 위해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ul115@